

마스크수거함 설치, 임대료 인하... 서울시민이 나선다

코로나19 극복, 시민 제안 불붙
“일회용마스크 반드시 폐기소각”
개인스케줄 기록 캠페인 등 의견

서울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책을 제안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시민들은 일회용 마스크 수거함 설치, 중국 우한시 지원, DDP 임대료 인하, 감염병 예방 캠페인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중랑구에 거주하는 정모 씨는 “만일 누군가 보건상태로 마스크를 사용했다면 위험하므로 신종 코로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는 반드시 폐기 소각해야 한다”면서 “정부청사나 관공서, 병원, 길거리 등에 마스크 수거함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사용한 마스크를 함부로 버리면 재전염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일회용 마스크 및 폐기 마스크, 그리고 확진환자 마스크를 모두 수거해 소각하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회용 마스크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이며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마스크 수거함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마스크 외 다른 폐기물의 혼합 투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수거함 설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한에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하자는 시민 제안도 나왔다. 김모 씨는 “우리나라 국민 38명이 사망한 2015년 메르스 때 당시 한국의 메르스 환자를 치료해 준 중국은 1억여원이나 나왔던 치료비를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웃간 빠른 공조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다”고 말했다.

김모 씨는 “지금의 상태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는 미개한 발상보다는 의료진, 검역팀, 방역팀, 구호물자 등을 보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우한에 마스크 보내기’ 시민운동을 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베이징시는 메르스 사태 종결 직후인 2015년 7월 베이징시장의 특별지시 하에 베이징시 관광부서장과 여행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 서울시를 먼저 방문했다. 같은 해 8월 서울시장 관광대표단은 베이징·상하이·광저우시 등의 협조로 중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관광 홍보마케팅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중국 도시들의 여러 협조에 힘입어 서울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베이징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전염병으로 얼어붙었던 서울시 관광시장이 회복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어려운 때 도움을 받은 만큼 이웃도시가 청

하는 도움의 손길을 무시하는 것은 장기적인 도시외교 방향과 그간 쌓아온 우호관계의 도리에 대치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베이징시와 자매도시결연 관계이며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텐진시, 저장성, 상하이시, 쓰촨성, 충칭시 등 총 8개 중국 성급(省級) 도시와 우호도시관계를 맺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내 방역대응과 예방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돼야 함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현 상황에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의 발생지인 중국의 방역·예방에 힘을 보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역시 방역물자 국내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장 시급한 자매우호도시들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시민들은 ▲DDP 상인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 ▲재난문자를 통한 확진자 동선 알림 ▲역학조사 시 환자 동선 파악을 위한 개인 스케줄 기록 캠페인 등을 시에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에 관리비 감면

서울시, 지하도상가 8월까지 혜택 미납 점포에 임대료 납부 유예 적용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 등 추가 대책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에게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와 관리비 감면 등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임대료 납입시기가 아직 오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로,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이며 대상 점포수는 1761개다.

시는 또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인건비의 임차인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원의 상인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 부담을 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5일부터 주 1회 간격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지하도상가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관리비 감면으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예산 800% 확대

서울시 571억, 총 3950대 지원 조기폐차시 최대 3000만원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800% 확대한 571억원으로 정하고 총 3950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노후 건설기계(2006년 이전 등록)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만큼 예산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DPF를 부착하거나 지게차, 굴

착기의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69억원을 투입해 446대(엔진교체 367대, 저감장치 부착 79대)에 대한 저공해 지원을 완료했다.

/김현정 기자

우이신설선 배차간격 줄여 운행 늘린다

서울시, 노선 혼잡도 개선

〈우이신설선 혼잡도 변화 추이〉

구분	'18. 10월	'19. 11월	'20. 1월 (시범운영)
오전 7시~9시	157%	161%	141%

*정릉역~성신여대입구역(우이신설선 구간 중 최혼잡구간) 기준 /서울시

서울시는 출근시간대 우이신설선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운행 횟수를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7~9시 배차간격을 3분에서 2분 53초로 7초 줄여 운행 횟수를 40회에서 42회로 2차례 늘리는 방식이다.

배차 간격 단축으로 전체 노선(신설동~북한산우이역)을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8분에서 46분 8초로 약 2분 줄어든다. 출근시간대 혼잡도는 161%에서 141%로 약 2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우이신설선 혼잡도 개선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돼 온 ‘삼양동 도시재

생 활성화와 태스크포스’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그동안 시는 운행속도 증가, 역정차시간 단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운행 횟수 증편을 추진해 혼잡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이신설선 시행사인 우이신설경전철(주)은 지난달 시범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증편 운행을 협의 중이다. 국토부 승인이 나면 4월 13일부터 운행 횟수가 늘어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한도 ↑

대출한도 2500만원서 7000만원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청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만 19~39세 청년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에 필요한 용자를 받아야 할 때 서울시가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엔 대상자의 대출 한도를 2500만원에서 7000만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늘렸다. 본인 부담 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 2% 지원을 받으면 연 1%대로 고정된다.

신청 기준인 본인 연소득 상한선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 중이거나 근로 경력이 있는 청년은 기존 5년 근로 기준이 삭제돼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의 신청 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시는 대출 신청 이전에 지점 상담과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심사 부결에 따른 계약 파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신청부터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대출 심사까지 모두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한도를 늘리고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